

“선거와 선거 사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토의민주주의

황현숙 | 사회의제팀 연구원 (sook@makehope.org)

I 요약

- 민주주의 그 자체는 좋은 정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투표의 결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2016년 한국의 정치 상황은 민주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진짜 정치는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된다. 선거와 선거 사이, ‘더 나은 민주주의’ 또는 ‘좋은 정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희망제작소는 시민과 함께 ‘좋은 정치’를 상상하고 이야기하는 토의민주주의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누가 또는 어떤 정책이 몇 퍼센트의 지지를 받느냐는 여론조사 결과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시민 동료들과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대화와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정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 변화는 시민들이 정치체계에 직접 정치적 의지를 투입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확보할 때 가능하다. 시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실의 문제들을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희망제작소는 ‘정치 수다의 장’을 열어 시민이 원하는 좋은 정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시민’의 ‘참여’로부터 찾아보는 작업을 진행했다.
- 대의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고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문제라고 하지만, 위기의 순간 촛불을 들고 나와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을 보면 현실정치에 대한 실망이 큰 만큼 더 나은 민주주의, 좋은 정치에 대한 열망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시민들의 열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일상의 정치에서 구경꾼이 되어버린 시민들을 비판적 관객으로 만드는 대안으로써 토의민주주의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I 키워드 토의민주주의, 속의민주주의, 시민참여, 좋은 정치, 정치잇수다

1. 선거와 선거 사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린다.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 민주화 이후 점차 낮아지는 투표율을 두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투표율은 곧 시민의 정치 참여와 같은 것이고, 민주주의는 주권자인 시민이 참여할 때 가능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투표가 시민정치 참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 투표율이 높아지면 정치가 달라질 수 있을까?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는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분명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이며 시민정치 참여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대표자 선출의 선거 중심으로 이해할 때, 시민은 몇 년에 한 번 치러지는 선거일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절반의 주권을 가진 인민'이 되고 만다(김만권, 2013:47). 더욱이 이런 시스템에서 공급자인 정당이나 정치권이 좋은 후보를 내놓지 않는다면 유권자로서의 정치 참여는 명백한 한계를 갖는다(이관후·황현숙, 2016:32).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는 이미 250년 전에 영국의 대의민주주의를 두고 "국민은 투표할 때만 자유롭다. 의원이 선출되면 국민은 다시 노예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투표가 끝나고 난 뒤에 평범한 시민들이 대표자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인 참여에서 멀어졌다는 이런 비판은 직접민주주의 등 대안적 민주주의 논의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적극적인 정치행위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김만권, 2013:39).

이런 관점에서 진짜 정치는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선거와 선거 사이, 더 나은 민주주의 또는 좋은 정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 우리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를 만들었고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경험했다.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는 75.8%에 이르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6년 현재, 우리는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표자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퇴행시키는지 목격하고 있다. 화염병과 최루탄이 사라진 자리에는 살수차가 서 있고,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위기에 맞서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오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해 9월부터 '시민이 바라는 좋은 대표, 좋은 정치' 연구를 진행하며, 시민과 함께 '좋은 정치'를 상상하고 이야기하는 토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¹⁾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좋은 대표, 좋은 정치의 기준은 정당이나 정치권, 언론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 그 과정은 수동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토의를 통한 시민이 말하는 정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적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가치를 담아 말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참여의 방식이고, 지금 한국 정치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이관후·황현숙, 2016:14).

2015년에는 좋은 대표의 기준을 찾아보는 '노란테이블2: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토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

1) 흔히 'deliberation'은 한국에서 '심의'나 '숙의'로 번역된다. "심의나 숙의라는 번역어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고뇌와 전문적인 논쟁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적사안에 대한 아주 가벼운 대화에서 반드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전문적인 대화까지 그 범주는 매우 넓다. (...) 이렇게 보면, 어떠한 결정을 위한 심사숙고보다는 대화를 통한 추론 정도를 가리키는 의미의 우리말로 '토의'가 적절하다."(이관후·황현숙, 2016:31) 이런 이유로 심의민주주의나 숙의민주주의 대신 토의민주주의라고 쓴다.

민 100인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를 통해 우리는 여론조사나 선거 결과로는 알 수 없는 시민들의 ‘좋은 대표’에 대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똑같은 후보를 선택했다라도, 그 이유와 기준은 다양했다. 좋은 대표의 기준이 같더라도, 지지하는 후보는 다른 경우도 있었다. 참가자들은 토론을 통해 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는 동시에 공감의 지점을 찾아냈다(이관후·황현숙, 2016:120).

‘정치잇수다’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이 함께 모여 ‘좋은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2016년 9월 29일 열린 첫 번째 모임은 “2016년 지금 여기의 시민+정치”라는 주제의 토론회로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정치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선거 때 투표에 참여하는 것 말고 시민의 정치 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또 시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구조적 제약들을 살펴보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적 시도를 살펴보았다. 10월 15일 진행된 두 번째 모임은 “여론조사로는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 워크숍으로, 모둠토론 중심으로 시민들의 좋은 정치에 대한 생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토론해보는 자리였다.

이번 이슈에는 ‘정치잇수다’ 토론회와 워크숍에서 시민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주제별로 정리해 옮겼다. 먼저 우리 사회 시민정치 참여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정당의 활동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직접적인 의견수렴보다 여론조사가 더욱 중시되는 상황, 시민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선거법의 문제를 정리했다. 다음으로 시민정치의 기반으로서 토의민주주의의 의의를 제시하고, 시민들의 좋은 정치에 대한 생각과 정치참여 방법을 논의한 정치잇수다 워크숍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시민정치의 새로운 대안으로 온라인에 기반해 시민정치 참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와글과 빠흐띠의 사례를 다뤘다.²⁾

II. 2016년, 지금 여기의 시민정치 진단

1)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결정이 아니다

정치인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한다. 정계에 입문하거나 출마를 선언할 때, 정당을 만들거나 탈당할 때, 또는 다른 정당과 연합할 때,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모든 행동이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며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선거 결과는 민의의 가장 확실한 지표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선거는 몇 년에 한 번씩 치러질 뿐이다. 그렇다면 대체 국민의 의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집회처럼 적극적인 의사 표현 방식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은 바로 여론조사이다.

여론조사는 공직자 선출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정당이나 정부, 언론 등

2) 본문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정치잇수다’ 토론회와 워크숍에서 발표된 자료와 참가자들의 발언을 옮긴 것이며, 추가 사례나 해석은 필자가 관련자료를 참고해 정리한 것으로, 이 경우 인용을 밝혔다. 9월 29일 토론회의 발표자와 주제는 다음과 같다: 여론조사분석 전문가 정한울 박사, “외주민주주의 시대의 도래와 여론조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부소장, “시민의 정치를 가로막는 헌법 위의 선거법”, 와글 김정현 매니저, “와글와글한 군중의 힘으로 만들어나가는 더 나은 민주주의”, 빠흐띠 권오현 대표, “유쾌한 민주주의 플랫폼 개발자 조합, 빠흐띠의 정치실험.” 토론을 맡은 정치철학자 김만권, 온라인 선거 운동 연구자 조희정, 사회를 맡은 이관후 희망제작소 연구자문위원의 발언은 현장 녹취기록과 관련 저서를 바탕으로 정리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수렴해야 하는 제도들은 여론조사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민의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민이 정당이나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는 정치적 결정에 민주적 대표성을 부여하는 기능도 한다(정한울, 2016:66). 특히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만큼 유권자의 평가와 변화를 파악하는 데 좋은 방법은 없다.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를 여론조사로 결정한 이래로 최근의 정당 공천 과정은 여론조사가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당은 이른바 개혁공천 내지 전략공천은 여론조사 결과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 경쟁력 없는 후보를 배제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고 선전한다. 하지만 정당정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정당 내 중요 결정의 주체는 당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 더욱이 이런 후보자 결정 방식은 ‘몇 퍼센트짜리 후보인가’에 대한 경쟁만 남겨놓고, 후보자들의 자질이나 정책적 비전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기회는 오히려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박상훈, 2011:302).

20대 총선은 예상 밖의 결과로 화제가 되었다. 대다수의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당의 압승을 전망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했다. 선거가 끝나고 여론조사 무용론이 들끓었다. 응답률 5% 미만, 20~30대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고 가중치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등 여론조사 방법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규제 조항이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민의 수렴보다 선거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 여론조사 및 데이터 분석 결과를 조사기관과 외부 전문가 분석에 의존해 보도하는 언론의 전문성 부족과 상업적인 보도 행태 등도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런 문제의 대안으로는 여론조사 방법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월간중앙, 2016).

그러나 이런 여론조사 방법론보다 더욱 중요한 건 시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정치의 본래 역할을 저버리고 여론조사에 기대는 정치권과 언론 등의 행태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 정한울 박사는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이나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활용하는 행태는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외주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정부, 정당 등 정치 주체들이 갈등의 조정과 정치적 조정 및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을 여론조사에 맡김으로써 정치적 사안이 방법론 문제로 대체되고 있으며, 심지어 정치적 권력구조 개편과 같은 개헌 사안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자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되는 정치 현실이 문제라고 비판했다(정한울, 2016:66-67).⁴⁾

정한울 박사는 “여론조사는 민의를 파악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그 결과를 유권자의 결정과 동일한 가치를 둘 수 없다”며, 외주민주주의의 탈피를 위해서 정치의 복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리더십의 역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책임까지 여론조사에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정한울, 2015:10).

3) 민주주의에 있어 정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정당이 당원의 의견보다 일반 시민을 대상 여론조사로 의사결정을 하는 일이 더 공정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통령 잘 뽑자고 스웨덴 시민 데려와서 투표하게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황세원, 2016).

4) 새누리당에서는 2010년 세종시 이전 수정안, 2011년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개헌을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MBC, 2011/02/05). 이재오 당시 특임장관은 “2011년 신년좌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이원집정부제 등 모든 안을 논의한 뒤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뜻을 따르자”고 제안한 바 있다. 20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공천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기도 했다, 정한울(2016), pp.66-67.

2) 투표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소통하는 일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며, 시민정치 참여의 기본 조건이다. 헌법재판소는 ‘대의제 민주주의 아래서 민주주의 구현의 원동력은 유권자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에 있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진작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공공적 법익’이라고 밝힌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1.12.29 선고 2007헌마 1011 결정; 박상규, 2016에서 재인용).

그렇지만 현실의 제도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정치에 대해 토론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활동조차 제약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규제항목만 200여개가 넘는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규제라는 입장도 있지만, 유권자나 후보자의 정치적 자유와 참여를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많다.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선거비용,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북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은 선거법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특히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위의 선거법’으로 규정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가 특정 정책을 지지한다고 의견을 밝히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주변에 호소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된다. 후보자도 제한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정해진 방식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신한 선거운동이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평소에는 얼굴도 못 보던 정치인이 선거 때만 뵈아달라고 나타난다고 비난받기도 하지만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선거일 15일 전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때만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소에서 김밥 등 다과를 내놓을 수는 있지만 젓가락으로 먹으면 ‘통상적인 다과 제공’의 범위를 넘어 ‘불법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사례는 유명하다.

선거의 공정성만큼 자유도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2011년 헌법재판소는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 제한에 대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부시켜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하고, ‘금지를 원칙으로, 허용을 예외로’ 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의 자유’를 원칙으로 해야함을 분명히 밝혔다(헌법재판소 2011.12.29. 선고 2007헌마1001 결정; 박상규, 2016:32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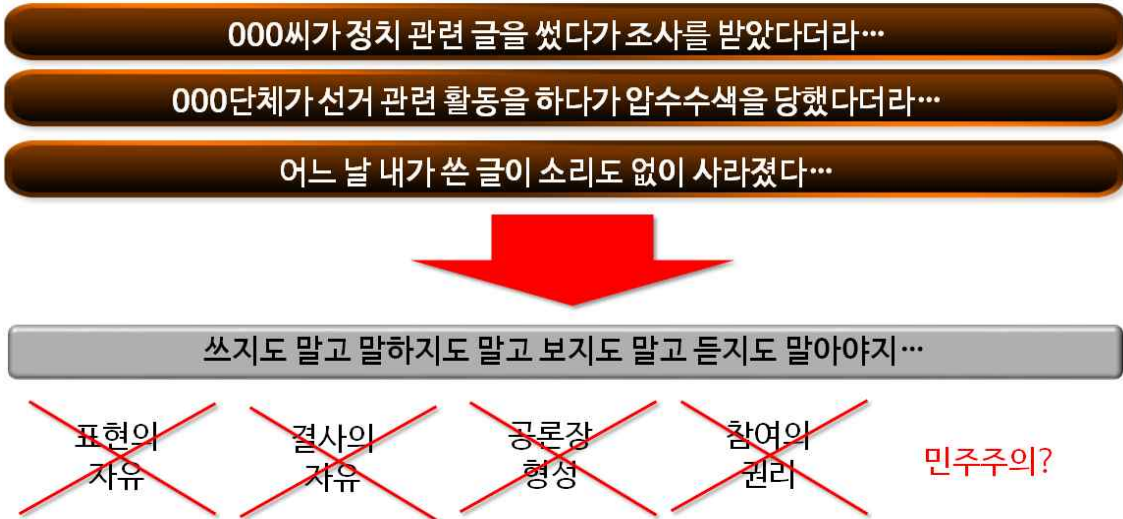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대 총선에서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 및 각 지역 선관위가 삭제한 게시물 1만7,101건으로 집계 됐다. 온라인상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관위가 삭제한 게시물 중 192건이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삭제된 게시글이 비판한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이 3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201건, 국민의당 84건 순이었다. 뉴스 여론조사 화면을 캡처해서 게시하거나 공유한 게시물도 삭제됐는데 여론조사고지 때 명시해야 할 사항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20대 총선이 끝나고 전국 1,0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활동했던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관련자들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검찰에 소환되고, 참여연대 등 관련 단체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당했다. 총선넷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등 낙선후보를 선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유권자운동을 벌였다. 시민단체가 낙천·낙선 대상자를 발표하는 활동은 ‘선거운동이 아닌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몇몇 보수단체에서도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힌 야당 의원들을 낙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표하기도 했다. 총선넷이 낙선 인물로 선정된 선거사무소 앞에서 연 기자회견은 ‘사실상’ 집회였으며(선거법 제103조 각종 집회의 제한), 온라인상에서 ‘워스트(Worst) 10, 베스트(Best) 10’ 후보자 투표를 진행한 것은 ‘사실상’ 여론조사였다는(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이유로 고발되었다. 총선넷은 이런 활동이 정당한 유권자운동이며 활동 당시에 선관위와 협의하며 진행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고발하는 건 선관위의 공정성이나 의도를 의심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겨레21, 2016.06.20).

[그림 1] 시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헌법 위의 선거법

이상한 민주주의에 사는 유권자는...



출처: 서복경, '정치잇수다' 토론회(2016년 9월 29일) 발표자료.

서복경 부소장은 이러한 사례를 제시하며, “유권자가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하는가는 유권자의 마음이다. 내 친구, 내가 아는 사람, 직장 동료들, 나와 비슷한 고민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과 정치 정보를 공유하면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 평범한 시민들이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 선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선거가 없는 시기에도 정치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환경에서 유권자의 합리적 반응은 정치적 무관심이며, 민주주의 구현의 핵심 요소인 ‘참여’는 비합리적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평범한 시민들이 헌법과 선거법 조항을 알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규제 중심의 선거법이 주권자인 시민을 구경꾼으로 만들고 그로 인한 문제의 피해도 시민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서 부소장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는 결과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대표가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이상한 정책을 만들고 세금을 쓰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Ⅲ. 시민의 좋은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1)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토의민주주의

희망제작소는 시민주도의 사회혁신, 지역재생,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구와 사업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히는 활동을 해왔다. 특히 노란테이블, 소셜픽션 등 시민주도의 사회혁신을 위한 속의 실험 및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해왔다.⁵⁾ '정치잇수다'는 희망제작소의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으로 기획되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표한다. 87년 민주화 이후 국민의 손으로 대표자를 뽑게 되었지만, 그것만으로 좋은 정치가 실현되지는 않았다. 민주화 이후 몇 차례의 정치제도 개혁은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나쁜' 정치인을 몰아내는 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평범한 시민들에게 정치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갖는 일, 정치인이 되거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은 나쁜 일을 하려는 것처럼 이야기 된다. 그 결과 정치는 정치인이나 소수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고, 주권자인 시민은 정치를 혐오하거나 냉소하는 구경꾼으로 남아있다.

희망제작소는 좋은 정치를 위해서 시민들의 좋은 생각, 정치 수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토의민주주의가 바로 그 모델이다. 토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선거주의로 전락하는 것에 반대'하고, 시민들 사이의 합리적인 절차를 거친 공적 토론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모델이다. 시민들은 토론의 공간에서 논쟁을 통해 편견을 걸러내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부족한 지식을 보완하고 더 바람직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은 우리 스스로가 참여해 얻은 것이기에 정당성을 갖는다(김만권, 2013:129). 이런 이유로 여러 국가에서 시민포럼, 국민패널, 시민배심제, 공론조사 등 토의민주주의에 기반한 다양한 시민참여 제도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⁶⁾ 토의민주주의는 우리가 던지는 한 표의 결과보다, 토론에서 제시하는 견해가 민주적 의사결정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중심적인 제도이지만, 승자와 패자를 남긴다. 51%의 승자가 49%의 패자들의 의지를 흡수해버리고, 51% 의지는 100%의 인민의 의지로 여겨지는 것이 투표의 현실적 구조다(김만권, 2013:46). 그렇지만 여전히 투표 결과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며, 투표 결과 그 자체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지는 못한다. 그렇기에 민주주의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각자가 내린 최선의 결정을 시민 동료에게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다.

토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당 중심의 제도권 정치에서 이탈하는 현실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모델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참여해도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 의견을 냄으로써 변화가 가능하고 대안을 얻을 수 있다면 참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기존의 정치에서 멀어지는 건 그 안에서 변화를 찾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토의민주주의는 대안을 찾는 일을 시민들 스스로 하자고 제안하는 이론이다.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투표에 기대기보다는, 일상에서의 토론을 통해 우리의 말과

5) 희망제작소가 개발한 속의방법론 사례와 분석은 유혜승(2016) 참조.

6)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슈포럼, 공론조사 같은 제도를 정책결정 과정에 활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대구시는 2015년 12월 「대구광역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정책 이슈별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안전, 건강 정책이나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의 하나로 시민토론회의를 개최하는 곳이 늘고 있다.

해석으로 사회변화에 참여하고, 토론을 통한 동료 시민들과의 만남과 연대를 통해 민주적 권력을 찾고 공유하자는 것이다(김만권, 2013:131).

희망제작소는 '시민이 바라는 좋은 대표, 좋은 정치'의 기준을 시민토론을 통해 찾아보고자 했다. 지난해 진행한 시민토론 프로그램, '노란테이블2: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는 시민이 먼저 좋은 후보의 기준을 정하고 그러한 기준이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확산되어서 정당들이 좋은 후보자를 내놓고 경쟁함으로써 좋은 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장기적으로 이런 시민토론의 확산을 통해 선거가 정당에서 내놓는 후보 중에 차악을 선택하는 어쩔 수 없는 투표에 그치지 않고, 진짜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고 시민 누구나 좋은 대표와 좋은 정치에 대한 기준을 찾고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정치 변화의 계기를 마련코자 한 것이다.

좋은 대표의 기준을 토론하는 과정은 단순히 어떤 인물이 뛰어난지를 논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시민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 민주주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개인적인 삶의 가치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 이후에 그것을 함께 이를 대표자의 기준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처음 만난 다른 시민들 앞에 꺼내놓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같음과 다름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적 주체로 거듭난다.

'정치잇수다'는 시민이 바라는 좋은 정치를 위해 필요한 것들, 사회제도적인 변화, 새로운 시도, 시민의 참여 방법을 다루는 장으로 기획했다. 시민의 정치를 가로막는 장벽들, 현실정치의 문제, 시민이 원하는 좋은 정치를 위해 변화해야 할 것들을 시민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함으로써 변화의 계기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시민참여 워크숍은 토론을 통해 투표 이외에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선거와 선거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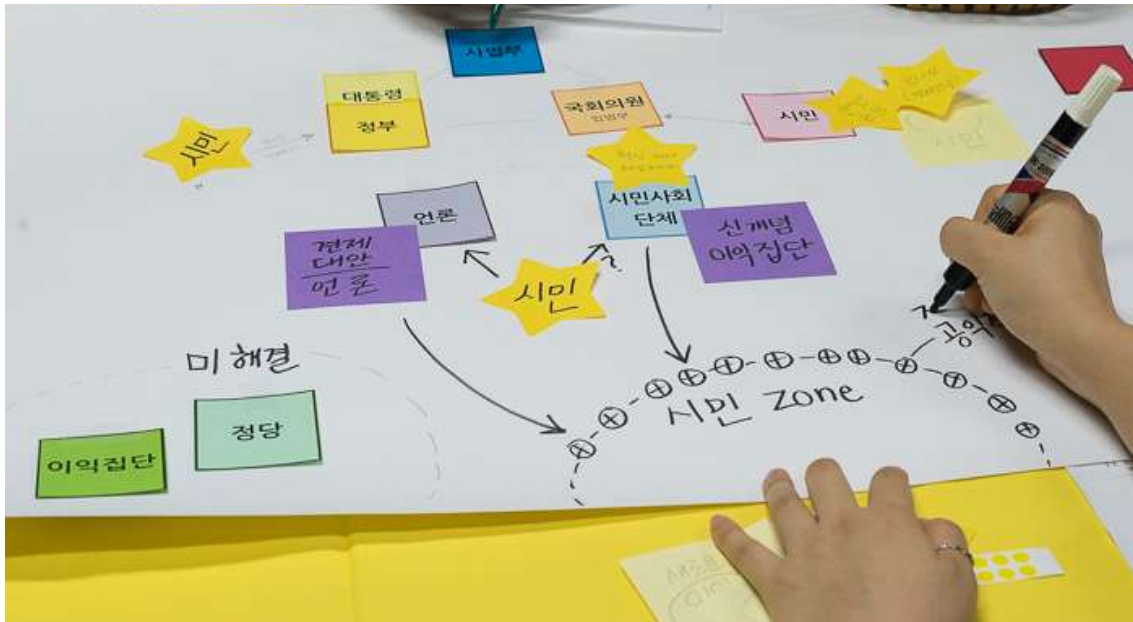
2) 시민정치의 새로운 연결고리 찾기

더 나은 민주주의, 좋은 정치를 위해서 시민의 참여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시민의 공적 활동 참여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5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지역사회 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 참여율은 10%에서 25% 사이에 머물고 있다. 반면 사적인 단체 활동은 종교단체 35.4%, 동호회 38.5%, 동창회나 향우회는 53.7%로 높게 나타나, 사회적 참여가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치 참여에 있어서 응답자 7,700명 중 42.7%가 자신이 정부가 하는 일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답했고, 44.6%는 정부가 국민의 의견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정부나 언론에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63.8%로 나타났다(한국행정연구원, 2015).

민주주의의 근본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와 실천에 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라 하더라도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수렴할 수 있는 정책결정 과정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고, 정당과 의회는 정책 연구소나 국민경선제 운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갈등 속에서 더 많은 시민과의 접점을 확보해야 한다(최장집, 2009:209-210). 변화는 시민들이 정치체계에 직접 정치적 의지를 투입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확보할 때 가능하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현실의 문제들을 자유롭게 소통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오현철, 2008:234). 이러한 변화는 선출된 대표자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요구하고 실천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10월 15일 열린 ‘정치잇수다’ 워크숍은 시민이 원하는 정책, 좋은 정치를 실현하는 방법을 ‘시민’에서 출발해 찾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민, 국회, 대통령, 사법부, 정당, 시민사회단체, 언론, 이익단체 등 우리 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정치 주체를 종이카드에 적고, 하얀 종이 위에서 움직이고 연결고리를 그려가면서 토론을 진행했다.

[그림 2] 좋은 정치를 위한 새로운 연결고리 찾기



토론의 첫 번째 단계로, 선거가 끝난 다음 일상에서 시민들이 정치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의 정치적 연결고리를 그려보았다. 참가자들이 정부나 국회에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주체로서 언론과 시민단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시민들의 의견도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보다 시민단체만의 활동을 하는 것 같아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좀 더 바람직한 정치 주체들 간의 관계 또는 연결 방법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해보도록 했다. 처음 토론을 시작할 때 투표 말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던 참가자들은 서로의 크고 작은 참여 경험을 공유하면서 시민이 바라는 좋은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시민 각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변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토론을 통해 우리 일상의 문제가 놓인 사회적 맥락을 해석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공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시민이 원하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워크숍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둠별로 공통의 관심사를 모아 함께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각자의 실천 방안을 정리했다. ‘모두의 정치를 위한 액션플랜 짜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단계에서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방법, 정치구조 변화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방법 등이 논의되었다.

IV. 21세기의 민주주의 실험

토의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서는 오프라인에서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새롭고 다양한 시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보편화는 사회변화는 물론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방성과 연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의 확산으로 시민 연대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다수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개발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시민의 정보유통, 청원, 온라인 공론장과 협의 및 투표를 통한 공공문제 해결, 정책 변화, 네트워크 정당 결성과 선거 득표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도 있다(조희정 외, 2016:55-56).

아이슬란드는 2010년 일반 시민들을 무작위로 선출해 헌법심의회를 구성하고 헌법개정안을 심사하는 ‘오픈 크라우드(Open Crowd)’ 실험을 진행했다. 인터넷을 통해 심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 개정안을 마련, 2012년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했다. 아르헨티나의 피아 만치니(Pia Mancini)는 시민정책결 플랫폼인 ‘데모크라시 OS’를 개발,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데모크라시 OS’는 의회 제출 법안에 대한 쉬운 해설, 법안제출 현황 및 관련 정보 제공, 찬반 투표, 댓글 토론 등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회, 멕시코 연방정부, 프랑스 공립중학교 개혁정책토론 등 지역행정은 물론 UN 기후변화협약 정책결정 과정에도 사용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의 시민주도 정치연대인 ‘바르셀로나 엔 코뮤(Barcelona en Comú)’가 당의 정책공약 선정 과정에 활용한 바 있다(조희정 외, 2016:62). 스페인의 전국정당 포데모스(Podemos)는 토론 플랫폼인 ‘루미오’를 활용해 40만 명의 당원 모두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피아 만치니는 오래된 제도와 관행에 기반해 소수 특권층의 이해에만 봉사하는 정치를 21세기 온라인 시대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19세기에 고안된 정치제도와 15세기의 정보기술(활판 인쇄술)에 설계된 소수가 다수의 이름으로 결정하는 데 정치에 참여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시스템에서 정치에 참여한다는 건 몇 년에 한 번 투표에 참여하거나, 정당의 일원이 된 다음 결정권을 가질 때까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진순 외 2016:15-16).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정치 과정에 투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와글’과 ‘빠흐띠’의 실험을 소개한다.

와글의 ‘듣도 보도 못한 정치’

‘와글(WAGL; We-All-Govern Lab)’은 ‘와글와글한 균중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실험’을 하는 정치벤처이다. 와글은 정치가 ‘아무나 하는 것’, ‘누구나 삼시세끼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득권 집단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를,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것이다. 와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민이 정치를 주도하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에 기반한 풀뿌리 시민정치 연구,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수평적 의사결정 모델 등 정치 혁신을 촉진할 기술을 개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와글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 저지를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동안 ‘필리버스터 닷 미’(http://filibuster.me/)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열었다. ‘시민들이 직접 국회의원들의 연설문을 작성한다’는 취지

로 개설된 이 사이트에, 11일 동안 30만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해 38,000여개의 글을 남겼다. 7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민들이 남긴 글을 낭독했다. 와글의 김정현 매니저는 “내 발언이 정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느낄 때 시민들이 정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걸 확인 할 수 있었다”며 “이런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이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듣도 보도 못한 정치’라는 제목으로 스페인의 포데모스,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등 해외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치혁신 사례를 스토리펀딩으로 소개하고 서울과 제주에서 국제컨퍼런스도 개최했다.

유쾌한 민주주의를 위한 빠띠의 실험

‘유쾌한 민주주의 플랫폼’을 만드는 개발자 협동조합 빠띠는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를 만드는 일을 한다. 빠띠의 권오현 대표는 온라인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정치로 여겨지지 않았거나 분절되어 있던 요소들을 연결하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일상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⁷⁾

빠띠의 첫 작품인 빠띠(parti.xyz)는 독립적인 온라인 공론장으로, 이슈별로 관심있는 시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변화의 방향을 논의하는 공간이다. 권 대표는 “정치라고 하면 의회를 떠올리거나, 시위나 데모를 이야기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정보를 인지하고, 호오를 표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정치 행위일 수 있다.” 빠띠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일상적으로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다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빠띠는 <한겨레21>과 공동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시민입법 프로젝트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빠띠가 만든 온라인 공간 업빠띠(<http://up.parti.xyz>)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관심있는 이슈를 뽑고, 각각의 이슈에 시민들이 투표하고, 투표한 결과를 모아 만든 법안을 국회로 보내는 프로젝트이다. 지난 6월, 1만 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 ‘GMO 완전표시제법’ 만들기가 결정되었고, 7월부터 ‘온라인 프로젝트 정당 만들기’가 진행되었다. 시민들의 참여로 결정된 당명은 ‘나는 알아야겠다’으로, 시민입법 프로젝트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 정보와 의견을 나누며 입법을 진행해 나간다.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시민, 당원 토론 투표를 통해 결정된 법안 내용을 윤소하 의원실(정의당)에 전달했고, 윤 의원실은 8월 16일 GMO 완전표시제법(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9월 5일 열린 오프라인 창당파티에서는 사전에 온라인에서 논의된 강령과 행동 수칙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나는 알아야겠다’ 당원들은 당 지도부 없이 수평적·기능적으로 활동하는 당조직을 결성하였으며 입법 활동, 감시 활동을 주제로 커뮤니티 활동(두빠띠, <http://do.parti.xyz>)을 이어나가고 있다.⁸⁾

와글과 빠띠는 10월 6일 시민 제안을 국회의원과 연결해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입법청원 플랫폼 ‘국회톡톡’(<http://toktok.io/>)을 공개했다. 시민 누구나 입법 제안을 할 수 있고, 지지자가 1천명이 넘으면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제안을 전달해서 국회의원들의 응답을 받고, 참여의사를 밝힌 국회의원과 지지자들이 함께 입법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국회톡톡에 게시된 첫 번째 입법 제안 ‘만15세 이하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이

7) 빠띠의 정치 실험과 서비스 소개는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0B1fCwOawxlHV2hRbEpfUS1yTGs>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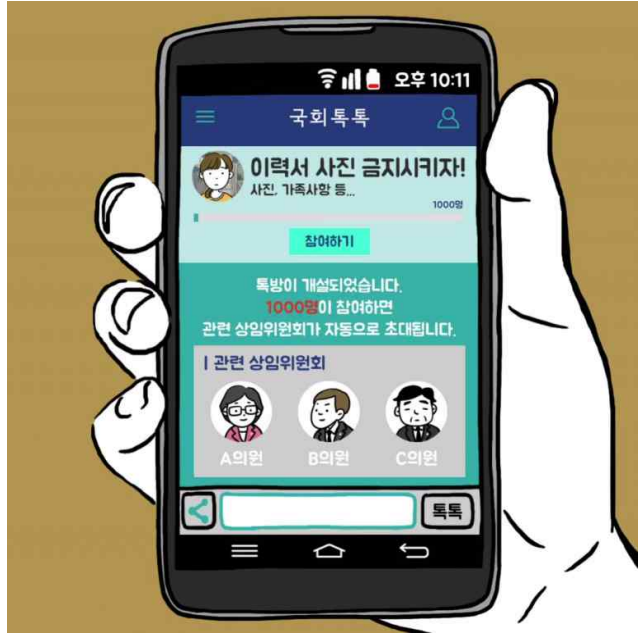
8) ‘나는 알아야겠다’ 활동 연혁과 관련 기사는 <http://up.parti.xyz/timeline> 참고.

1,180명의 지지를 모았고, 현재 5명의 국회의원이 이 제안에 동의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 국회톡톡 메인 화면



[그림 4] 국회톡톡 소개 영상 갈무리



와글과 빠흐띠의 사례는 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치 실험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지거나, 제도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선거운동 연구자 조희정 박사는 와글과 빠흐띠의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혁신적인 기술은 어디에나 있지만, 이를 활용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내는 데는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참여를 고려한 한국형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⁹⁾ 와글의 김정현 매니저는 “정치라고 하면 정치인이 문제고, 누구를 뽑아야 한다는 선거 이야기를 주로 한다. 이제는 정치 리더를 바꾸면 정치가 바뀔 것이라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런 것 말고 일상적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더 중요하다.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오프라인 활동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이 가진 가능성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빠흐띠의 권오현 대표도 온라인 기술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하고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온라인 정치 실험의 의미를 정리했다.

9) 디지털 사회혁신이 기술의 확산이 아니라 기술을 통한 사회발전이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한지, 또 이미 많은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서울, 고학력자, 도시인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논의되지 않는 농촌, 소외지역, 주변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상향식 서비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디지털 사회혁신의 정당성과 온라인 청원, 공공문제 해결 사례 발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논의들은 조희정 외(2016) 참조.

V. 이제 토의민주주의를 제안한다

민주주의는 곧 좋은 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 그 자체는 좋은 정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투표의 결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2016년 한국의 정치 상황은 민주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치지도자를 교체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정치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선거와 선거 사이, 시민이 나서 좋은 정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이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누가 또는 어떤 정책이 몇 퍼센트의 지지를 받느냐는 여론조사 결과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선거 제도나 권력구조 개편은 분명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 혹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그 다음에 권력구조와 그 구조에 적합한 대표를 뽑는 선거제도를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이관후, 2016). 희망제작소가 그동안 진행해 온 새로운 실험들을 통해 우리가 내린 결론은 위기에 처한 대의민주주의의 극복을 위하여 “토의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며, 따라서 이제 우리는 “토의민주주의”를 제안한다. 대의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고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문제라고 하지만, 위기의 순간 촛불을 들고 나와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을 보면 현실정치에 대한 실망이 큰 만큼 더 나은 민주주의, 좋은 정치에 대한 열망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2016년 광화문 광장은 물론 촛불집회가 열린 전국의 거리 곳곳에서, 온라인에서 크고 작은 공론장이 열리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다른 동료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고단한 일상의 삶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민주적 순간은 ‘초일상’이라는 철나의 순간”이다 (김만권, 2013:127).

“토의민주주의”는 여론조사나 언론 기사에는 담기지 않는, 진짜 시민의 목소리에 주목한다. 시민 동료들과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대화와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정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이야기가 정치제도에 투입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의 경로를 확보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가 토의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시민들과 현실정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새로운 참여의 경로를 토론한 이유이다.

‘정치잇수다’ 참가자들은 민주주의와 참여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동안 학교나 직장에서 정치 이야기 하는 걸 피해왔다는 한 참가자는 정치잇수다를 통해 정치토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으며, 다른 사람들과 정치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좋은 정치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가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하면 어렵지만, 나의 일상에서 내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들을 함께 조금씩 바꿔나간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좋은 정책, 좋은 정치가 가능할 것 같다”는 소감을 남겼다. 공감의 표현과 대화는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세계와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하는 시민 동료가 있다는 희망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참여로, 시민의 관점에서 사

회혁신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좋은 생각을 모으고 알리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더 많은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 이야기가 필요한 때이다.

지금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시민들의 열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의 정치에서 구경꾼이 되어버린 시민들을 비판적 관객으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김만권, 2013).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사건과 결정들을 그저 바라만보는 수동적 관객이 아닌 스스로 관심 갖고 눈여겨 본 것들을 표현·해석하며, 이를 동료시민들과 연결하여 아는 것을 전하고 모르는 것을 배우는 가운데 공유된 ‘시민권력’을 찾아내는 시민이 필요한 때이다.

참고문헌

[논문 · 단행본]

- 김만권. 2013. 『정치가 떠난 자리』. 서울: 그린비출판사.
- 박상규. 2016. “이상한 선거법, 이대로 대선 치러야 하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국회시민정치포럼 주최. 2016년 7월 7일. 선거법 개정 토론회 자료집, 『20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선거법 과제』.
- 박상훈. 2011. 『정치의 발견』. 서울: 폴리테이아.
- 오현철. 2008. “한국민주주의의 위기? 토의민주주의적 대안.” 『시민사회와 NGO』 제6권 제1호, pp.215-241.
- 이관후·황현숙. 2016. 『(희망리포트 2016-03)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노란테이블2 사업결과보고서』. 희망제작소.
- 이진순 외. 2016. 『듣도 보도 못한 정치』. 파주: 문학동네.
- 정한울. 2015. “외주민주주의 시대의 선거여론조사: 4.29 재보권 선거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AI오피니언리뷰』 제2015-05호, pp.1-11.
- 정한울. 2016. “외주민주주의 시대의 여론조사.” 『한국정당학회보』 제15권 제1호(통권 32호), pp.63-105.
- 조희정 외. 2016. “디지털 사회혁신의 정당성과 민주주의 발전: 온라인 청원과 공공문제 해결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제23권 제2호, pp.54-72.
- 최장집. 2009. 『민중에서 시민으로 -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 파주: 돌베개.
- 한국행정연구원. 2015. 『2015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언론보도]

- 『경향신문』. 2014. “기초단체 무공천 파동 ‘민익’는 기만당했다.”(2014.04.12).
- 『월간중앙』. 2016. “B급 여론조사에 굴절된 한국사회의 자화상.”(2016.06)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1647> (검색일: 2016.11.15.)
- 『한겨레21』. 2016. “경찰, 낙선운동 겨냥하다.” 제1117호.(2016.06.20.)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924.html (검색일: 2016.11.15.)
- 『MBC뉴스』. 2015. “이재오 특임장관, 개헌 필요성 거듭 역설”(2015.05.12)

[온라인 자료 · 홈페이지]

- 유혜승. 2016. “(희망이슈 제11호) 넥스트 데모크라시 ‘모두 함께 디자인하다’ - 희망제작소형 속의방법론의 분석과 확장의 기회 탐색.” <http://www.makehope.org/?p=35169> (검색일: 2016.11.15.)
- 이관후. 2016. “브렉시트 투표, 개헌 논의 반면교사.” 『프레스이안』.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38285 (검색일: 2016.11.18.)
- 황세원. 2016. “[시대정신을 묻는다⑤] 이제 정치인은 가난한 사람은 찾아가지도 않는다.”(2016.03.22.)

<http://www.makehope.org/?p=33398> (검색일: 2016.11.15.)

국회톡톡 <http://toktok.io>

‘나는 알아야겠다’ 활동 연혁, 관련 기사 정리 <http://up.parti.xyz/timeline>

빠흐띠 정치실험과 서비스 소개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0B1fCwOawxlhHV2hRbEpfUS1yTGs>

업빠띠 <http://up.parti.xyz>

필리버스터닷미 <http://filibuster.me/>

I HOPE
therefore I am
소셜디자인스쿨
SDS
퇴근후
Let's
HMC
인생이
Social Innovation
Camp 36

UP
CO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시니어소셜미더스쿨
리얼
집단
지성
재난안전연구
지역공동체
모금진로가

저 아저씨 시민사랑방
이상해요. 오픈포
호혜와 연대
디자인
재발견
서울의
재구성

good fund raiser
good fund raiser
1004
SDS 시니어
취향경제
아카데미
사회적
therefore I am
HOPE
금용

희망제작소
Asia NGO Innovation Summit
리얼 집단지성프로젝트
김치찌개데이
장운변화

Make Hope
해피포터 시민문화예술을
good fund raiser 호혜와 연대

희망제작소
소셜디자인스쿨 36
소셜미더스쿨 김치찌개
웃는 마음 만들기 데이
몬드라곤
시민문화예술을
HOPE
HAPPY SENIOR AWARDS
목민관
학교

공공 리더
00000
감사의식탁
social innovation
나는 희망한다
시민참여
시니어
대학생
공공디자인캠프
생애설계
프로젝트
Think and Do Tank
시민문화예술을
HOPE

시민문화예술을
HOPE
HAPPY SENIOR AWARDS
목민관
학교

시민문화예술을
HOPE
HAPPY SENIOR AWARDS
목민관
학교

사회적기업인턴포럼 도시재생
마을이학교다
카뮤니티
비즈니스
한일포럼
마을기업
신문화공간조성사업

클라우드펀딩
리포트
윌크로플
@서울
공공경제
기계가
교육

행복설계아카데미
U3A
서울
생애설계
아카데미
프로젝트
확현ICT

천개의 직업
거버넌스
목민관
학교
시민문화예술을
HOPE
HAPPY SENIOR AWARDS
목민관
학교

Asia NGO Innovation Summit
희망제작소
ANIS
기술
social innovation
공공서비스디자인캠프
아시아 사회적
어워드

HOPE
HAPPY SENIOR AWARDS
사회적기업
어린이 함께
두번째
인생설계
social innovation

행복한 공동체
good fund raiser
99%
세상을 바꾸는 36시간
시민참여형 사회적
메니페스토
기계가 이상해요.

여행사
공공
문화예술교육
희망제작소
리얼
NGO
귀중귀촌 아카데미
다자녀인재
농촌희망본부
좋은 서울만큼기 대학생
공공디자인캠프

세상의 모든 희망이 모이는 곳
희망제작소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Think and Do Tank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가입문의
02-2031-2130
give@makehope.org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희망제작소

www.makehope.org

